감자·고구마·수수에 FTA 직불금 첫 지급

전남도, 8월 24일까지 접수… 32억 소요 예상

전남도는 25일 "올해 감자, 고구마, 수수에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"고 밝혔다.

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2004년 한-칠 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'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'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%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%를 보전하는 제도다

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25일부터 8월24 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, 감자, 수수는 한-미 FTA 발효(2012년 3월14일) 이전부터, 고구마는 한-아세안 FTA 발효(2007년 5월 31일)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.

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 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,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. 지급 단가(ha당)는 감자 131만5000원, 수수는 14만4000원, 고구마는 8000원 수 준으로 예상되며, 지급 절차는 8월24일 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,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급된

전남도 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%, 고구마는 21% 수준으로 피해보전직 불금으로 3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. 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

수요집회 참석자들 "할머니 사랑합니다"

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32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참석 자들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. $^{/$ 연합뉴스

기초연금 대상자 4만명 10만원 이하 받는다

복지부,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 \cdots 해당자 1% 예상

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면, 소득 하위 70%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~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.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1%,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.

'소득 역전'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.

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기초노령연 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 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,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 다"며 "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봐야겠지 만,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%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"고 밝혔다.

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 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·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(1.4%)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(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900원)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.

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 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 큼, 비율을 비슷하게 1%로만 잡아도 약 4 만~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 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

애기이다. 단독가구 2만원,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 감액 규정은 '소득 역전' 현상을 막기 위 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. 1 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'월 소득 87만원 이하'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 데,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~20만원 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 득이 많은 경우(88만원)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▲월소득 79만 원초과~81만원이하 8만원 ▲81만원초 과~83만원이하 6만원(노인 단독가구) ▲ 83만원초과~85만원이하 4만원 ▲85만원 초과~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 액 상한선이 마련된다.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,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

靑 새 정무비서관에 신동철

박근혜 대통령은 공 석인 정무수석실 정무 비서관에 신동철 국민 소통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.

민경욱 청와대 대변 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 과 만나 "신 비서관이 어제

과 만나 "신 비서관이 어제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. 신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찾고 있다"고 전했다.

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 도연구소(현 여의도연구원) 부소장을 지 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여론 조사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 했으며,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소통비 서관을 맡아왔다. /박지경기자 jkpark@

아시아나, 90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다닐수도

美 NTSB "작년 사고 원인 조종사 과실"

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를 당할 수 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(NTSB)는 24일(한국시간) 사고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.

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 각 최대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다. 이를 합산하면 운항정지 기간 은 최대 90일이다.

항공법 시행규칙에는 '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'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.

아시아나항공 사고 사망자는 3명이며 중상자는 49명이다. 중상자 2명을 사망 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 인셈이다.

'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'인 경 우로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한다.

또 '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'라는 조항에 따라 추가로 운항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. 다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. 아시아나항 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

코 노선에서 3개월 가까이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.

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안전규정 위반 으로 사이판 노선에서 7일간 운항정지 처분받았는데 30억~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.

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놓고 운항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가능성은 낮다. 과징금 액수는 인명피해(10억원)와 항공기 등 재산피해(5억원)를 합해 최대 15억원이다.

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한 미국 국 가교통안전위원회(NTSB)의 최종보고 서가 다음달 말께 나오면 내부 검토 결 과와 NTSB 보고서를 토대로 곧바로 행 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 를 결정할 예정이다.

아시아나항공 측은 "과거 인명피해가 컸던 괌 추락사고 때 대한항공이 3개월 운항 정지당했는데 괌 사고와 샌프란시 스코 사고는 차이가 있다"면서 선처를 기대했다.

아시아나항공은 '사고조사 결과 항공 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'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내년부 터 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 을 받는다. /연합뉴스

'관심·위험군' 장병 5만명

軍 지난해 '사고예측' 검사 내달까지 관심병사 재분류

군 당국이 지난해 전군을 대상으로 '사고예측'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만 명에 가까운 장병이 '관심'과 '위험군'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육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"작년 에 전군을 대상으로 1차, 2차에 걸쳐 사고예측 판별 검사를 실시했다"면서 "이 검사에서 2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'위험 군'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"고 밝혔다.

이 관계자는 "사고예측 판별 검사에서 '관심'을 요구하는 장병도 3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"면서 "지휘관이 보살펴야 할 '관심병사' 규모가 예상보다 많았다"고 전했다.

이 검사 결과대로라면 병영 내에서 군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장병의 규모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. 이런수치는 현재 전군 병력이 62만여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병력의 8% 수준이다. 관심과 위험군에 속하는 장병은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

때문에 지휘관이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하는 등 지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
국방부는 관심과 위험군에 속하는 장병 규모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자 오는 7월까지 이뤄지는 전군 특별정밀진단에서 관심병사를 재분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

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"B급, C급으로 분류된 병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A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군은 한국국방연구원(KIDA)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(특별관리대상), B급(중점관리대상), C급(기본관리대상)으로 분류하고 있다.

군은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에 대해서 도 군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에서 조기에 퇴출하도록 '현역복무 부적합처 리'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

국방부 관계자는 "이번 부대 특별정 밀진단에서는 왕따 등 집단 따돌림과 병 영 부조리 등을 집중적으로 식별해 낼 것"이라고 밝혔다. /연합뉴스

